

2026년 하반기 조달청 업무보고

-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
기술선도성장 · 공정성장 · 균형성장을 뒷받침 -

2026. 07.



조달청

2026년 하반기 조달청 업무보고 중점 추진과제 (요약)

전략 1 전략조달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

1 혁신조달의 성과 창출 가속화

- (제품발굴) 지방정부 스카우터 도입, AX-Sprint 등 범부처 기술실증사업 연계 등을 통해 지역특화 전략산업(AI, 로봇, 기후테크 등) 제품을 중점 발굴
- (운영 개선) 혁신조달 플랫폼 고도화로 맞춤형 제품 구매정보를 제공하고, 지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, 지정 및 시범구매 사후점검 강화 등 제도 내실화

2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

- (진입촉진) 조달기업이 AI 적용 제품을 정부에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AI 적용 제품의 신속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
* 진입등록 요건 완화, 입찰가점 부여 전문 심사트랙, 계약서류 간소화, 패스트트랙 도입 등
- (조달AX) 조달 전 과정 20개 이상의 단위업무에 AI Agent를 구축 추진

3 중소기업 성장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지원

- (사회적책임) 사회연대경제기업에 가점 부여 및 실적요건 면제 등 지원을 강화하고, 일자리 우수기업·부품국산화 기업 입찰 우대 등 상생조달 운영
- (수출지원) 해외실증, 스케일업 R&D 등을 통해 혁신제품 수출을 지원하고,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

4 공공비축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

- (비축 확대) 비철금속^{6종} 목표비축량(60일)을 신속하게 달성하고, AI·전력망 등 수요와 리스크를 반영한 새로운 공공비축계획('27~'31년) 수립
- (비축 개선)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비축을 위해 비축방식을 개선하고, 5대 권역 대형 비축기지 체계로 재편, AI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

전략 2 공공조달을 통한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

5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넓히는 조달 자율화

- (조달 자율화)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경기·전북 대상 시범운영('26.1.~) → 성과분석 후 모든 지방정부 확대('27)
- (부작용 최소화) 조달청이 자체조달 건을 분석하여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시정·개선 권고하고, 약자기업 조달실적 상시 점검 및 공개

6 지방기업 살리는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

-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와 성장기회 확대를 위한 '비수도권

- 기업 조달 우대방안'(4월)에 따른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
- 지방우대 가점 신설, 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제품 우선 구매,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해 경쟁없이 구매가능한 범위 확대 등

전략 3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

7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및 건전한 경쟁 유도

- (조사강화) 신고조사 외 직권조사 실시, 조사불응 시 과태료 부과, 주요 기관의 부당행위 조사 실시(9월)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엄정 대응
- (공정평가) 기업-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신고·조사를 활성화하고, 위원별 평가이력 관리 강화 및 평가위원 공무원 의제 추진^{조달사업법 개정}
- (경쟁확대) 사전규격 공개 및 검토 강화, AI 활용 모니터링, 신고센터 운영을 연계하여 특정규격 설정 등 발주기관의 경쟁제한 행위 차단

8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참여 근절

- (실지조사) 모든 적격심사 공사 낙찰예정자 대상 실지조사를 본격 실시하고, 국토부·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의심업체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 병행
- (입찰보증금) 페이퍼컴퍼니 의심기업, 심사포기이력자, 낙찰예정자 및 실지조사 적발기업^{공사},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^{물품} 등에 부과

전략 4 공공조달 관리 강화와 미래 혁신 기반 마련

9 조달가격 및 품질 관리 강화

- (가격관리) 가격비교가 쉽도록 조달규격을 민간규격으로 전환하고, AI 가격 비교·분석 시스템 구축, 가격 중점관리 품목 지정 등 추진
- (품질관리) 안전관리물자 전문기관 검사 의무화와 품질점검 확대를 추진하고, 안전·품질관리 전문위원회 신설,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건설안전에도 만전

10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혁신 기반 마련

- (조달제도 선진화) 신기술·융복합사업, 과점시장 등에 적용가능한 입·낙찰 방법 개발 등 미래형 공공조달제도 모색
- (공공조달관리사) 국가기술자격인 '공공조달관리사' 조기 정착 지원

순서

I. 상반기 주요 성과 1

II. 업무추진 방향 3

III. 중점 추진과제 4

[전략1] 전략조달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 4

- 1 혁신조달 성과창출 가속화
- 2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
- 3 중소기업 성장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지원
- 4 공공비축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

[전략2] 공공조달을 통한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6

- 5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넓히는 조달 자율화
- 6 지방기업 살리는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

[전략3]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7

- 7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및 건전한 경쟁 유도
- 8 페이퍼컴퍼니 등의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

[전략4] 공공조달 관리 강화와 미래 혁신 기반 마련 8

- 9 조달 가격 및 품질관리 강화
- 10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혁신 기반 마련

I. 상반기 주요 성과

①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 강화

- **(지정확대)** 전문기관, 민간투자사 등과 협력하여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% 증가(228 → 297개)
 - 특히 AI, 로봇, 기후테크 등 전략산업 제품이 신규 지정의 40%(120개)
- **(구매확산)** 시범구매 확대('25 529 → '26 839억원), 구매목표 비율 상향* 등을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10% 증가(4,319억원 → 4,767억원)
 - * 중앙정부 1→1.4%, 지방정부 1.5→1.9%, 공공기관 1.7→2.2%, 지방공기업 1.2→2.8%
- **(해외실증)** 해외실증 국가(20 → 26개, 30% ↑) 및 실증제품(35 → 48개, 37% ↑)이 확대되고, 해외실증 실적을 기반으로 후속 수출 성과 창출
 - * 사례) 재활운동용 로봇의 경우 키르기스스탄 실증 후 입접국가에 6배 후속 수출

②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 조달 자율성 확대

- **(시범운영)**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경기·전북, 전기·전자제품군 대상으로 자율화 시범 실시('26.1.1.~12.31.)
 - 소규모 구매 건을 중심으로 자체 구매 증가(건수 기준 약 6%p 증가)
- **(부작용 완화)** 수요기관 자체발주 건의 법령위반 등을 조달청이 본격 모니터링하여 다수 시정(34,822건 점검 → 1,433건 시정요구, 시정률 97%)

③ 중소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성장 기회 확대

- **(규제합리화)** 환경 변화에 맞게 조달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조달제도 리부트(Reboot) 등 과제 118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
 - 간담회, 공모전 등 현장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되 창업·벤처기업, 전략산업 등에 대한 진입 규제*를 중점 개선
 - * 벤처나라 기술평가 생략, 디지털서비스 계약서류 면제, 목록번호 부여 처리기간 단축 등
- **(제값주기)** 낙찰하한율을 2%p 상향 조정하고, 단품 물가조정제도*를 도입하여 물가상승분을 조달가격에 신속하게 반영
 - * 특정규격 자재 가격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, 선박·승강기 등 5개 품명에 시범 도입

④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

- **(공사)** 적격심사 공사 낙찰예정자 대상으로 실지조사 시범 실시(1~6월)
 - 시범조사(110건)를 통해 부적격 업체(11개사)를 낙찰 제외하였으며, 조사 이후 유사공사 대비 입찰자 약 37% 감소 효과
 -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(50명 규모)하여 안정적인 전수조사 기반 마련
- **(물품)** 입찰등록기준 강화, 입찰보증금 부과, 낙찰심사 포기 시 제재 등 물품공급입찰 전 과정의 관리 대책 마련('26.1월)

⑤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 수주 차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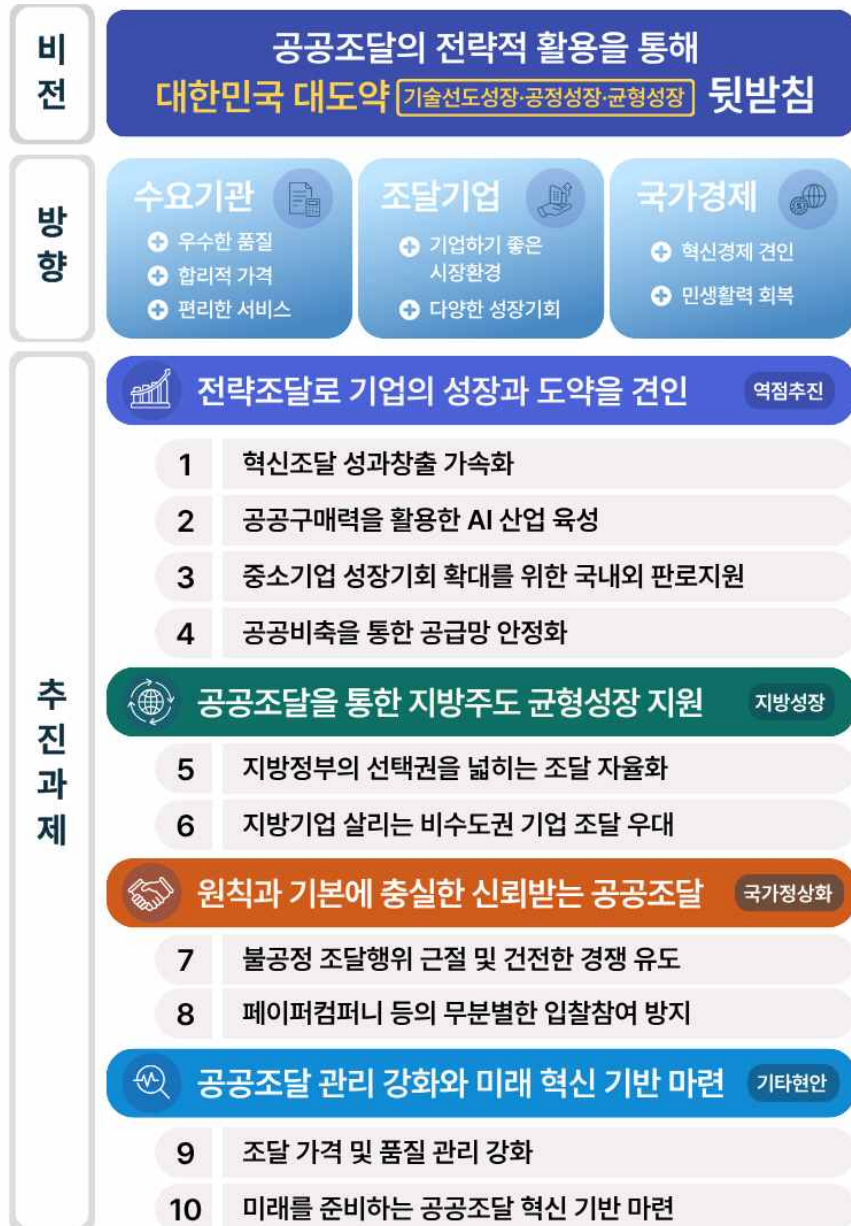
- 공사, 물품, 용역 등 공공입찰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입·낙찰 평가기준 강화
 - **(공사)** 중대재해 신인도 감점, PQ·종합심사 시 건설안전평가 배점제 전환, 하도급업체 안전평가 추가 등 안전관리 책임 강화
 - **(물품·용역)** 중대재해 발생기업 적격심사 감점, 단가계약 적격성 평가 결격 처리,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감점 및 지정연장 배제

⑥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신속·선제적 대응

- **(공공비축)** 차량용 요소,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, 적기 방출로 공급 안정화
 - * (차량용 요소) 베트남 현지 직접계약 등으로 2.5개월분 확보 및 3차레(3,694톤) 방출(비철금속) 국내 수요량 8일분을 선제 비축하고, 전쟁 후 3개월간 전년대비 109% 증기한 물량 방출
- **(공급관리)** 종량제봉투, 아스콘 등 유가연동제품의 계약단가를 신속 조정하고, 주요 국가사업 현장(200개)에 아스콘을 차질 없이 공급
 - 주요 건설자재는 가격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여 직전 조사 가격에서 3~5% 이상 상승 시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

⇒ 상반기 규정·시스템 정비, 추진체계 구축 등 **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, 하반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본격화**

II. 업무추진 방향



III. 중점 추진과제

전략 1 전략조달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

① 혁신조달 성과창출 가속화 [국정과제 35-4]

- **(발굴·구매)** '30년 제품 5,000개, 구매 3조원을 목표로 혁신조달 확대
 - 지방정부 스카우터 도입 등을 통해 지역특화·전략산업 제품을 집중 발굴하고, 지역별 전시회, 구매상담회 등 지역 기반 구매 확산
 - 'AX Sprint', '정부 첫 실증·구매프로젝트' 등 범정부 기술실증사업과 연계하여 AI, 로봇, 기후테크 등 전략산업 혁신제품 중점 지원
 - 혁신조달 플랫폼(혁신장터*)를 고도화하여 지정체계를 일원화하고, 맞춤형 제품·구매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 편의 제고

*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관리, 쇼핑물 등 기능을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시스템

- **(운영 개선)** 기업부담은 줄이고 품질관리는 강화하여 혁신조달 내실화
 - 특허 등 인증이 없이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, 지정 절차와 서류 간소화, 지정기회 확대 등 추진
 - 지정 및 시범구매 사후점검을 강화하여 혁신제품 부실 지정, 상용화 지연, 후속구매 연계 부진 등 문제점을 개선

②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 [국정과제 24-1, 24-3]

- **(AI 산업 육성)** 조달기업이 AI 적용 제품을 정부에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AI 적용 제품의 신속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
 - * (등록) 나라장터 쇼핑물 등록요건 완화 및 실적 요건 폐지
 - (입찰) AI 전문기업(또는 적용제품)에 대한 심사 가점, AI 전문심사트랙 운영
 - (계약) 계약절차 간소화, 패스트트랙 도입, 경쟁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 확대
- **(조달행정AX)** '공공조달 AX 기본계획(2월)'에 따라 조달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AI 기업에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업무도 효율화
 - 예정가격 작성, 원가계산, 가격비교, 심사·평가 등 20개 이상의 핵심업무에 AI Agent 구축을 추진

③ 중소기업 성장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지원 (국정과제 37-2)

- (사회적 책임)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조달제도 운영
 - (사회연대경제) 가점 확대^{물품·시설}, 실적요건 면제^{용역} 등 우대조치하고, 전용 쇼핑몰 운영, 컨설팅·교육 등 맞춤형 지원 강화

< 현장 목소리 >

▶ "사회연대경제기업은 공공 납품이 성장의 기반이 되는데, 좋은 제품이 있어도 알릴 방법이 없고, 공공기관이 먼저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. 제품 계약, 구매상담회, 홍보 등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지원이 필요합니다" (26.4. 사회적기업 간담회)

- (좋은일자리)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,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 등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
- (국산부품화)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을 입찰에서 우대하고, 혁신·우수 제품 지정 시 국산부품 50% 이상 사용하도록 운영
- (수출지원)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강화
 - (혁신수출) 해외시장 맞춤형으로 혁신제품 스케일업 R&D를 확대하고, 유관기관과 협력*하여 해외실증 및 후속 수출 지원
 - * 중기부, KOTRA 등과 해외실증 수요처 발굴 및 수출 컨설팅 제공 등 지원
 - (글로벌 조달)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, 입찰 역량 강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 시장개척단, 수출상담회 등 집중 지원

④ 공공비축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(국정과제 37-7)

- (비축 확대) 비철금속^{6종} 목표비축량(60일)을 신속하게 달성하고, AI·전력망 등 수요와 리스크를 반영한 새로운 공공비축계획(27~31년) 수립
- (비축방식 개선)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비축을 위해 새로운 비축모델 도입 및 타소비축 개선*을 추진하고, 비철금속 장기공급계약 확대
 - * 정부 직접비축+요소수 생산기업과 사전약정 방식 시범 도입, 무상대여 폐지 등
- (비축역량 강화) 소형기지를 통폐합하여 5개 권역의 대형기지 체계로 재편하고, 비축 전 과정을 관리하는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* 구축
 - * 가격수요공급 분석, 비축공간 활용, 방출시기 결정 등을 지원하는 AI 기반 시스템(26년 ISP)

전략 2

공공조달을 통한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

①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넓히는 조달 자율화

- (시범운영) 민·관 합동 평가, 현장소통 등을 통해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시범운영* 결과를 분석하고, 모든 지방정부 확대(27)를 위한 보완 조치
 - * 경기·전북, 전기·전자제품군을 대상으로 자율화 시범 실시(26.1.1.~12.31.)
- (기반완비)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및 노하우 전수, 지방정부 간 교차 구매를 위한 법령 개정^{지방계약법령}, 전용몰 구축 등 자율화 정착기반 완비
- (부작용 최소화) 조달청이 자체조달 건을 분석하여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시정·개선 권고하고, 약자기업 조달실적 상시 점검 및 공개
 -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등 모든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, 비리 적발 시 '원스트라이크아웃제*' 적용 추진
 - * 일정기간 동안 자율구매를 중단하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도록 조치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"조달청 계약 물품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제품을 비교해 지역여건과 현장수요에 맞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어 업무대응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"(1.5. 지방정부 담당자)
- ▶ "조달자율화는 단지 업무를 지방정부에 넘긴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조달청이 지원·관리 역할은 병행하여 공공조달 거버넌스를 강화한 사례"(6.22, 행정학회)

② 지방기업 살리는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

-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와 성장기회 확대를 위한 '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(4월)'에 따른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
 - (수주기회 확대) 물품·용역 입찰 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하고, 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
 -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소액 수의계약 확대 및 경쟁 없이 구매 가능한 금액 기준 상향* 등 병행 추진
 - *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 금액 : 5천만원(중기1억원) → 1억원(중기2억원)
 - (판로지원) 수도권에서 열던 혁신제품 전시회를 비수도권에서 분산 개최하고, 우수제품 지정 연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우대

전략 3**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****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및 건전한 경쟁 유도**

- **(조사·제재 강화)** 신고조사 외 직권조사 실시, 조사불응 시 과태료 부과,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조사 실시(9월)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엄정 대응
 -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약금 차등화 및 가중·감경을 적용하고, 계약 보증금 할증, 제재효력 승계 등을 통해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
- **(공정평가)** 기업-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신고·조사를 활성화하고, 위원별 평가이력 관리 강화 및 평가위원 공무원 의제 추진^{조달사업법 개정}
- **(경쟁확대)** 사전규격 공개 및 검토 강화, AI 활용 모니터링*, 신고센터 운영을 연계하여 특정규격 설정 등 발주기관의 경쟁제한 행위 차단
 - * 특정규격 여부, 참가가능업체 수 등을 AI 시스템을 통해 자동 분석('26.下)
 - 아울러 쇼핑몰 계약에서 기준금액 미만도 2단계 경쟁을 허용하고,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제안공고 경쟁방식* 적용을 확대
 - * 수요기관이 경쟁참가기업을 지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기업이 참여하도록 하여 경쟁

② 페이퍼컴퍼니 등의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

- **(실지조사)** 모든 적격심사 공사(종합+전문)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지 조사를 본격 실시(7월~, 50명 규모 조사부서 운영)
 - 국토부·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페이퍼컴퍼니 의심 건설업체에 대해 선제적 실태조사 병행
 - * 조달청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추출 → 국토부, 지방정부가 조사 실시
- **(업체관리)** 입찰참가 등록기준 강화, 낙찰심사 포기 시 제재 등 물품 공급입찰 참여업체 관리 강화
- **(입찰보증금)** 페이퍼컴퍼니 의심기업, 심사포기이력자, 낙찰예정자 및 실지조사 적발기업^{공사},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^{물품} 등에 부과
 - *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선량한 기업의 불편 및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절차 마련 (예 : 입찰보증금 부과 후 실지조사 통과 시 계약보증금 전환 등)

전략 4**공공조달 관리 강화와 미래 혁신 기반 마련****① 조달 가격 및 품질 관리 강화**

- **(가격관리)** 가격비교가 쉽도록 조달규격을 민간규격으로 전환하고, AI 가격 비교·분석 시스템 구축, 가격 중점관리 품목 지정 등 추진
 - 시설공사는 간접공사비 산정방식 개선, 가격조사 품목 조정, 가격조사 및 조사 결과 반영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
- **(품질관리)** 우수한 품질의 조달물자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
 -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 검사를 의무화하고,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안전관리물자에서^{확대} 단가계약물품 전체로 확대
 -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‘품질보증조달물품’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고, 서비스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 이행실적 평가 도입
- **(건설안전)** ‘안전·품질관리 전문위원회’ 신설하여 설계단계부터 안전 검토를 강화하고, 공사관리에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를 적극 도입·활용

②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혁신 기반 마련

- **(조달제도 선진화)** 물품 다양화, 기술진보 등에 맞게 조달제도를 혁신
 - 현행 계약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신기술·융복합사업, 과점시장 등에 적용가능한 입·낙찰 방법 개발 등 미래형 공공조달제도 모색
- **(공공조달관리사)** 국가기술자격인 ‘공공조달관리사’를 조기 정착*시켜 수요기관·기업의 효율적인 조달업무 수행 지원 및 관련 분쟁 예방
 - * 제1차 공공조달관리사 검정 시행 예정('26.10. 필기, '26.11. 실기)
- **(전자조달 전담기구)** 조달정보시스템(나라장터와 21개 부수 시스템) 운영 및 유지관리, 물품목록, 전자조달 수출 등을 전담할 기구 설립을 검토
 - * 현재 조달정보시스템 운영은 직접운영, 민간위탁, 전자조달지원센터로 3원화되어 있어 안정성, 효율성 저하